

보도해명자료 (‘19. 5. 18.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한전 부채가 증가한 것은 국제회계기준 변경이 주요 원인
이며 정부의 무리한 정책으로 증가한 것이 아님

(한국경제 5.18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)

- ◇ 한전 부채가 증가한 것은 국제회계기준 변경이 주요 원인이며 정부의 무리한 정책으로 증가한 것이 아님
- ◇ 5월 18일 한국경제 <정부 무리한 정책에, 전력 공기업 ‘부채 비상’>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.

1. 기사 내용

- 한국전력공사, 한국중부발전 등 7개 전력발전 공기업 부채가 올 1분기에만 6.6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은 회계기준 변경과 정부의 안전 규제 강화에 따른 설비투자 등으로 **차입금이 급증해서임**

2.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한전 부채가 증가한 것은 국제회계기준 변경이 주요 원인임
 -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부채 7.1조원 중 약 70%인 4.6조원은 국제회계기준 개정으로 **비용 처리하던 기존 리스계약(장기운송계약, 임차계약 등)을 부채로 계상함에 따라 증가한 것이며, 추가비용이 발생한 것은 아님**
 - ※ 한전 연결기준 부채증가액은 7.1조원으로 발전 6사를 포함한 연결 대상 109개 자회사가 모두 포함된 수치임
 - 아울러, 전력 설비 신설·보강 등을 위한 투자비 재원 조달을 위해 2.2조원의 차입이 증가하였음

- 1 -

- 또한, 지난 분기 대비 부채비율은 다소 상승했지만, 해외 주요 전력 유틸리티 기업들과 비교시 **한전의 부채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**이며, 한전은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재무개선 노력 등을 추진 중임
- * 이탈리아 Enel 246%, 프랑스 EDF 438% 등 (‘18년말 연결), 한전 173% (‘19.1Q 연결)

※ 문의 : 전력시장과 박찬기 과장 / 김은성 사무관(044-203-5172)